



Energy News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지킴이' 뜬다 115개 공공기관 자체 에너지절약 활동 전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의 첨병 역할을 할 에너지지킴이가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115개 공공기관은 자체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담할 '공공기관 에너지지킴이'를 선발했다.

이들 공공기관 에너지지킴이들은 22일 대전 EXPO 과학공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에너지지킴이'는 지난 12월 28일 수립된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2005~2007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로, 고유가시대를 맞이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민간의 에너지절약운동 확산을 유도하고 향후 '에너지 절약형 국가'로 나아가기위한 에너지절약 시스템화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올해 393억원 지원 산자부 세부 보급계획 공고...차등지원방식·쿼터제등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 39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257% 증액된 393억원을 지원하는 세부 보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보급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원과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보조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안이 4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함께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 10월에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하여,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요건, 수입부과금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품질, 안전, 환경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예산의 일부(약 100억원)를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기업에 할당해 집행토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복지시설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지원(한전구매가격-전력거래소거래가격)은 물론 추가적으로 설치비의 30%를 보조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추진과제에 올한해 61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신규사업에 247억원, 계속과제에 363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 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금년도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신규 추진과제를 공모한다.

올해 에너지·자원기술개발로 책정된 정부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432억원) 41% 증액된 총 610억원으로,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금은 363억원이며 신규과제로 지원할 금액은 총 247억원 규모이다.

에너지절약 2005년도 민간단체 협력사업 시민단체 대기전력 1W 소비자운동 적극 추진

대기전력 1W 소비자운동 등 에너지절약사업에 시민단체가 적극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절약실천운동을 정착하고 에너지 저소비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금년도 민간단체 에너지절약협력사업 공모를 실시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이 제안한 15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대기전력 1W 소비자운동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해 구매자의 에너지절약행동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계획사업 부문에 9개 사업이 추진되고, 단체 특성에 맞는 독창적·창의적이고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제안사업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사업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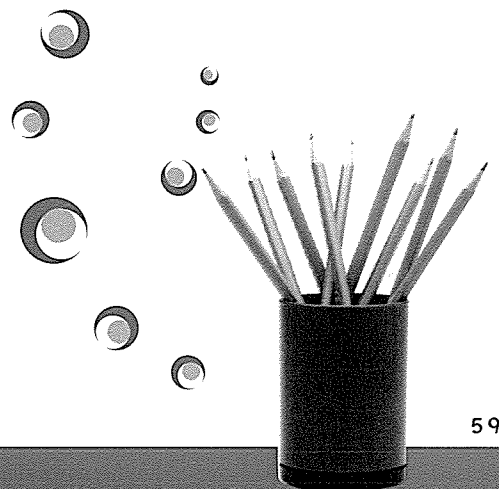
국내최초 CDM사업 본격 돌입

에너지관리공단과 (주)강원풍력발전은 7월 착공예정인 98MW(2MW x 49기) 규모의 강원풍력단지 사업을 교토메카니즘의 하나인 CDM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력, 매립지가스 소각, 바이오매스 발전 등 82건의 CDM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4건의 사업만이 기후변화유엔사무국(UNFCCC)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이며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CDM사업이다.

이번 CDM사업을 통하여 연간 14만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해외에 크레딧으로 판매할 경우 10년 동안 약 3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를 시작으로 상용화단계에 접근해 있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CDM사업으로 총 4,960MW, 연평균 35만톤의 이산화탄소 크레딧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상 개도국의 지위를 갖고 있어 교토메카니즘 중 CDM사업만을 할 수 있으며, 국내의 CDM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감축실적 크레딧을 선진국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온실가스감축기술 시장형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총 3,259억원 지원 산자부, 올해말까지 2.3%~2.63%로 비중 늘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올해 총 3,259억원이 투입되고 현재 2.3%의 비중이 올해말까지 2.63%까지 확대된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올해 '신·재생에너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3,259억원(전년대비 66% 증가)을 투자해 2.3%인 신·재생에너지비중을 연말까지 2.63%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정비해 보급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화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바이오디젤 보급확대, 태양열 A/S체계 구축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기업제, 부품 표준화·공용화,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기본안 마련 보급보조사업시 쿼터제 시행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한 기본안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시공업, 위탁 운영사업, A/S 등 보수체계 대행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동 제도의 마련을 통해 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등록기준(안)은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부문으로 나뉘지는데 태양에너지는 기술인력 4인(기사2, 기능사2),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40㎡이상 △풍력은 기술인력 5인(기사1, 기사2, 기능사2), 자본금 4억원 이상, 사무실 50㎡이상 △지열에너지는 기술인력 4인(기사2, 기능사2),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40㎡이상, △기타 6인(기사1, 기사3, 기능사2), 자본금 6억원 이상, 사무실 60㎡ 이상으로 마련됐다.

산업체 기후변화협약 인지도 90.6%로 현저히 증가

금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산업체의 기후변화협약 인지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金均變)이 에너지다소 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90.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과 9.4%만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11월 대한상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19%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9.4%만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산업체에 대한 홍보강화 및 각종 언론 매체 보도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별 기업의 기후변화협약 인지수준을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협약 기초지식을 7단계의 난이도 수준별로 ①온실효과, ②온실가스 종류, ③교토의정서발효, ④감축의무 부담 방식, ⑤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⑥추가성과 베이스라인, ⑦인벤토리) 구분하여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고려 건교부, '신도시계획기준' 시행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은 가능하면 신도시내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납골시설 등은 최대한 신도시내에 확보하고 지역특성, 역사를 반영한 개발테마를 설정하여 정체성 확립, 지역역사 박물관, 전시관 건립, 신도시개발백서를 발간한다.

또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고려된다.

신도시도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Greenbelt),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Whitebelt), 맑은 물(물벨트, Bluebelt)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선진국 수준의 아름답고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로 조성된다.

Social Mix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여지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에도 적절한 혼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형열병합발전(안) 의견 수렴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 투자사업 표준화(안)이 소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준화(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용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함께 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소형열병합발전 표준화(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공감을 이뤘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는 분야별, 업계

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에너지종합이용효율, 연숙난방능력 및 NOx배출량, 사업경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지역난방협회 인사동정

정동윤 초대 협회장 퇴임

정동윤 협회 초대회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4월 30일 국회의원 출마로 4월 6일 협회 회장직을 퇴임했다.

한태일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

한태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본부장은 4월 6일 정동윤 사장이 퇴임함에 따라 사장 직무권행을 맡게 되었다.

안산도시개발(주) 신입사장에 정동년 씨 취임

안산도시개발(주) 신입사장에 4월 18일 정동년씨가 취임하였다. 한편 정 사장은 본 협회의 감사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전기공(주) 신입사장에 함윤상 씨 취임

한전기공(주)은 4월 29일에 신입사장으로 함윤상(前 한국전력공사 관리본부장)씨가 취임하였다. 따라서 함 사장은 본 협회의 감사를 맡게 되었다.

박근해 이사,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전임

박근해 인천공항에너지(주) 사장은 4월 6일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전임하였다.

인천공항에너지(주) 신입사장에 유병률 씨 취임

인천공항에너지(주)는 박근해 전임사장이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전임함에 따라 5월 11일 신입사장에 전 아시아나 항공(주)부사장이었던 유병률씨가 취임하였다.

본 협회 간사에 이정미양 발령

협회는 3월 21일자 간사에 이정미(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미שר실 근무)양을 임용 발령하였다.